

보도시점

2025. 11. 11.(화) 조간
2025. 11. 10.(월) 16:00

배포

2025. 11. 10.(월)

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? 지역현장의 생생한 의견 듣는다
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, 광주 서구 치평동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
-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한 정부 지원 필요 사항 청취 및 담당자 격려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내년 3월 27일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을 앞두고,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.
-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,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.
-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·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,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‘광주다움 통합돌봄*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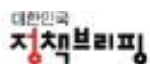
* 2024년 ‘정부혁신 왕중왕전’ 금상(대통령상) 수상

-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(월)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,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,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.
-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,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.

-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, 정부 지원 요청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,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.
- 간담회를 마친 후 윤호중 장관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한편, 통합돌봄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하며,
- “국민 여러분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보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<참고> 통합돌봄 제도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	책임자	과 장	허승원 (044-205-3301)
		담당자	사무관	조총래 (044-205-3312)
담당 부서 <통합돌봄>	보건복지부 의료·요양·돌봄통합지원단	책임자	과 장	장영진 (044-202-3030)
		담당자	사무관	구재관 (044-202-3043)



통합돌봄 제도 개요

◆ 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(돌봄통합지원법)」(24.3월 제정)
→ 現 시범 사업 → '26.3월 법 시행, 전국 적용

- (목적)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(Aging in place)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
 - (대상자)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등
 - (지원내용) 보건의료(진료, 간호, 재활, 호스피스, 복약지도 등)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생활,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
 - (지원절차) 통합지원 ①신청 → ②조사 → ③판정 → ④지원계획 수립 → ⑤통합지원 제공 → ⑥모니터링
 - (기반조성)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,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
- 전담조직에서 노인, 장애인을 포함하여 통합지원 절차 운영

【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】

